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0. 25. / (총 13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단 장 담 당 자	안 광 찬 이 은 실		032-440-7801 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과 장 담 당 자	최 종 동 심 연		043-719-2051 043-719-2054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홍 정 익 진 여 원		043-719-9050 043-719-20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헬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헬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런 때일수록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혼선을 일으켜선 안된다고 하면서, 일부 지자체나 병원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한 곳도 있어 국민 입장에서 보면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정부 차원의 대응에 엇박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추진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 등 시간이 촉박한 만큼 복지부에게 좀 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면서, 올해는 참여기업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처음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참가하는 등 2016년 첫 행사 이후 최대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내수 진작을 위해 많은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 산업부에게 지자체 및 업계와 함께 방역과 경제가 조화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현재 대규모 감염 확산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10월 11일(일)부터 10월 24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8.7명으로 이전 2주간(9.27.~10.10.)의 59.4명에 비해 9.3명 증가하였다.
 -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52.9명으로 이전 2주간(9.27.~10.10.)의 46.6명에 비해 6.3명 증가하였으며,
 -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5.8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9.27.~10.10.)의 12.8명에 비해 3명 증가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9월 27 ~ 10월 10일		10월 11일 ~ 10월 24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59.4명		68.7명
수도권	46.6명		52.9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4.3명	⇒	19명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26건		21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7.4% (180/1032)		11.4% (139/1228)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특히, 지난 한 주(10.18.~10.24.)는 신규 환자 수가 일일 75.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9.20. ~ 9.26.	9.27. ~ 10.3.	10.4. ~ 10.10.	10.11. ~ 10.17.	10.18 ~ 10.24.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5.6명	57.4명	61.4명	62.1명	75.3명
수도권	59.6명	44명	49.3명	44명	61.7명
비수도권	16.0명	13.4명	12.1명	22.1명	13.6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3.4명	15.6명	13명	18명	20명

- 다만, 지난 2주간 새로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가 21건으로 이전 2주간(9.27.~10.10.)의 26건에 비해 감소하였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11.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기반으로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으나,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사회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서로에 대한 배려에 기반한 생활방역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0월 23일(금)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운영실태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이 점검은 12월 17일(목)까지 계속된다.
 -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안전지킴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내 전자출입명부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사용, 휴대폰 미소지자 등을 위한 수기 명부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방역 인력과 감염 취약계층 등에도 방역물품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안전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10.12.) 이후, 안전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65건으로 전체 신고(99건)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
- * 주요사례) 음식점, 카페 등에서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포장·배달 포함)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11월 13일(금)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고 있다.

- 경기도는 단풍철을 맞아 11월 2일(월)부터 11월 16일(월)까지 2주간 도(道), 시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 경찰서 등과 함께 관광 전세버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이에 따라 남이섬, 용문사, 에버랜드 등 도(道)내 주요 관광지와 휴게소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탑승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여부, 차량 소독 여부 등 방역 관리 상황과 운전자 음주 여부,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3 헬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등으로부터 ‘헬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고위험시설 운영 재개와 10월 31일(토) ‘헬러윈 데이’ 등으로 인해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이에 따라 10월 21일(수)부터 11월 3일(화)까지 2주간 클럽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외 150㎡ 이상 식당과 카페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 특히, 10월 31일(토)까지는 클럽 등 유흥시설의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심야 시간(22시~03시)에 이태원, 홍대, 서면 등 주요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하여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한다.

* 서울(이태원, 홍대, 건대입구, 강남역, 교대역, 신촌역), 인천(부평), 부산(서면) 등

- 식약처·지자체·경찰청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수도권 음식점·카페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4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최근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감염 예방 방역수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염 관리에 미비점이 있었다.
 -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사전검사, 종사자의 증상 감시와 유증상자에 대한 업무 배제, 면회객 등 일반인의 출입통제 등이 미흡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 또한, 병실 내의 환자 밀집도가 높고, 병상 간의 충분한 간격이 확보되지 않는 등 감염에 취약한 입원환경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보다 정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시설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이미 수도권 지역은 지난 10월 19일(월)부터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검사 결과를 평가한 후 시·군·구 단위로 전수검사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참고로 지난 10월 22일(목)부터 11월 4일(수)까지 2주간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 또한, 최근 집단 감염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여 매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시·군·구)을 선정하고,

- 유행 우려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전수검사하는 한편, 유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고위험군(기관·시설, 직종 등)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 감염 취약시설에서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한다.

- 종사자 행동수칙과 표준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고,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과정의 대상을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양 시설,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확대한다.

- 이와 함께 지자체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2회/일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 종사자 업무 배제, 마스크 착용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요양 병원 등에 유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방역 관리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2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69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6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06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4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24.)는 적발된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7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2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3,873개소, ▲유흥시설 2,784개소 등 33개 분야 총 1만2886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6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8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9개반, 760명)하여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